

“K-문화 선도 전북 만들 것”

김관영 도지사 예비후보, K-문화 육성 지원센터 건립 등 문화·예술 정책 공약 발표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지역별 역사와 전통문화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문화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제모악권(전주, 익산, 완주), ▲새만금해안권(군산, 김제, 부안), ▲황토 휴먼화권(정읍, 고창), ▲섬진강 문화권(임실, 순창, 남원), ▲진안요원 문화권(무주, 진안, 장수) 등 지역만이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문화 특성을 고려해 문화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키워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K-문화 육성 지원센터를 건립해 전북도가 K-문화를 선도하겠다. 이곳에서 K-POP, 웹툰 작가 등을 육성해 전북이 세계적인 아티스트 요람의 역할을 하겠다”면서 “도내 호원대, 백제예술대 등의 대학과 연계해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을 통한 시너지를 꾀하며, 이로 인해 도내 청년 이탈을 막고, 문화적 일자리 창출과 전북



의 공연문화예술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과 함께 가상현실(VR) 체험 가이드 시스템을 구축, 세계인들이 자국 언어로 쉽고 편리하게 전북 전통문화소리, 한복, 한식, 한옥, 한지)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이어, 태권도를 무술 차원에서 공연 문화예술의 단계로 발전시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태권도 공연 예술 사업의 확대를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아울러, “지역 예술가의 창작활동 증진을 돕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체부에서 각 도에 지원하는 문화진흥기금을 받는 예술인들이 기

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일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하는 예술인들의 창작비 항목을 반영해 예술인들의 능동적인 창작 활동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주, 익산, 군산, 김제 폐공장을 활용해 전북도민이 이용하고 타시·도민에게는 유료로 하여 경제적인 수입 및 도시 재생 효과를 만들겠다”며 “지역의 흥물, 또는 미 이용 폐공장을 전북도가 매입해 문화예술공간, 어린이모험놀이터, 직업탐험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예비후보는 “전북 문화예술의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아티스트와의 교류를 통한 지역 문화 예술의 세계화 발전을 도울 것”이라며 “전북의 유·무형 문화유산인 관소리, 출판 한지 등을 세계화하는 일에 전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남부권 거점도시, 남원”

‘도지사 출마’ 안호영 의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스포츠훈련원 조성 지원”



전북지사 출마예정자인 안호영 국회의원은 13일 “남원시를 문화관광 및 의료복지, 체육 인프라가 두터운 명실상부한 남부권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남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시 발전을 위한 4대 비전을 발표했다.

안 의원이 밝힌 4대 비전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국립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조성 지원 ▲지리산 권역 전북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리산 친환경 전기 열차 도입 지원이다.

안 의원은 “서남대 폐교 이후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이 수년째 담보상태에 놓여 있다”며 “도지사 임기 내 서둘러 관련법을 처리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확립하게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전북 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인 국립전북스포츠중

합훈련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남원시가 스포츠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국적인 각종 체육 대회와 다양한 국제스포츠 행사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지리산 권역 신생아 및 영아의 24시간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북형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남원은 전북 동부권과 지리산 권역을 아우르는 의료거점도시인데, 산후조리원이 없어 전주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출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출산육아 복지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전북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으로 지리산권역 신생아의 안전과 산모의 건강을 돌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10 곳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으며, 전국 8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역시 전북에는 전무한 형편이다.

안 의원은 네 번째로, “환경을 보호하면서 세계적 신약개발도 가능한 ‘지리산 친환경 열차’를 서둘러 도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겨울철 폭설로 인한 산악 벽지의 이동 편의를 기하고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20년간 전북의 낙후와 쇠퇴는 어느덧 우리에게 무기력이라는 사슬까지 덧씌웠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물과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전북에서 민주당을 지켜온 유일무이한 20대, 21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전북 몫을 당당히 찾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안호영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면접심사를 받고 있는 후보자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 위원회가 열린 13일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후보자들이 면접심사를 받고 있다.

“무주 제2 도약 위한 일꾼 될 것”

황의탁 도의원, 무주군수 출마 위해 의원직 사퇴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이 13일 무주군수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황 의원은 “무주군의 제2 도약을 책임질 일꾼으로 나서겠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황 의원은 11대 도의회에 입성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내 소신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또한, 노인요양병원 유치 무주소방서 건립 등 무주군 발전과 군민의 생명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을 이끌어 내는 활약을 펼쳤다.

그는 아울러, 도의원 출마 당시 공약한 의정활동비 전액을 무주군 사회복

지시설에 기부하며, 그 약속을 지켜 눈길을 끌기도 했다.

황의탁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의 경험과 노하우를 양분 삼아 희망과 행력이 넘치는 무주군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황 의원의 공약은 ▲무주 향토산 4계절 내내 이용 가능한 생태학습장 및 휴식공간 조성,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관광평화화, ▲천마중자산업 구축, 천마음식 특화거리 조성(무주군 대표음식 개발) 등 무주 천마 소득작목으로 육성, ▲광역 농산물 도매시장(유통센터) 조성, ▲무주향년 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소상공인 기본소득 등 4인(무주군민으로써 최소한의 삶을 보장), ▲농업인력지원센터 건립으로 부족한 농업인력 지원 등이다.



황의탁 전북도의회이 13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황의탁 의원은 “오늘 사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무주군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고 무주군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무주군수 도전 포부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지정환의 숨결이 살아있는 임실성당, 국가등록 문화재 등재 추진”

한원수 임실군수 출마예정자, 지 신부 기일 맞아

한원수 임실군수 출마예정자(전북도의원 더불어민주당)가 13일 임실성당을 방문해 “임실성당에 대해 국가등록 문화재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한국 치즈 산업의 개척자인 지정환 신부의 기일이기도 하다.

별개로 출신인 지정환 신부는 1964년 임실성당 주임신부로 발령받은 이후 치즈 생산을 통해 가난한 임실 주민들을 구제하려고 노력했고 임실 공동체 문화 창출을 위해 힘쓴 종교인이다.

한 의원은 “1950년대 지어진 임실성당은 지정환 신부가 양 두 마리를 데



리고 처음 치즈를 생산한 유서 깊은 곳이다”면서 “전북도 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가등록문화재(근대문화유산)로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정환의 역사스톰리를

간직하고 있는 임실성당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동선이 임실성당까지 이어져 임실읍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원수 의원은 “김대건 신부의 동생 김난식 프란치스코 신부가 병인박해(1866년) 당시 화문산 자락에서 신앙혼을 형성하며, 종교활동을 수행했던 흔적을 재현해 한국 천주교의 순례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필수'... 방역수칙을 지켜주세요

복수노조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기준 규정

윤준병 의원, ‘타임오프 배분법’ 대표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13일 복수노조 간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기준을 규정해 노조 분쟁을 최소화하는 ‘복수노조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관련해 조합원 수에 따른 면제한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복수노조 간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기준은 없어 복수노조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을 놓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동조합별로 가입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임무를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를 의견 대립이 자주 발생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둘러싼 복수노조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단체별 조합원 수·교섭단체 노동조합의 업무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령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배분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타임오프 제도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 간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한 후에 복수노조 사이에 면제시간을 배분해야 하지만, 현재 배분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노조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공판정위원 위원서건 중에서도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과 관련된 건이 다수 있는 만큼, 오늘 복수노조 간 타임오프 배분 기준을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복수노조 사이에 분쟁 최소화를 위해 복수노조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교섭단체별 조합원 수와 교섭단체노조의 업무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타임오프 제도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 간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한 후에 복수노조 사이에 면제시간을 배분해야 하지만, 현재 배분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노조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공판정위원 위원서건 중에서도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과 관련된 건이 다수 있는 만큼, 오늘 복수노조 간 타임오프 배분 기준을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복수노조 사이에 분쟁 최소화를 위해 복수노조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교섭단체별 조합원 수와 교섭단체노조의 업무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타임오프 제도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 간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한 후에 복수노조 사이에 면제시간을 배분해야 하지만, 현재 배분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노조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공판정위원 위원서건 중에서도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과 관련된 건이 다수 있는 만큼, 오늘 복수노조 간 타임오프 배분 기준을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복수노조 사이에 분쟁 최소화를 위해 복수노조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교섭단체별 조합원 수와 교섭단체노조의 업무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타임오프 제도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 간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한 후에 복수노조 사이에 면제시간을 배분해야 하지만, 현재 배분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노조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공판정위원 위원서건 중에서도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과 관련된 건이 다수 있는 만큼, 오늘 복수노조 간 타임오프 배분 기준을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복수노조 사이에 분쟁 최소화를 위해 복수노조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교섭단체별 조합원 수와 교섭단체노조의 업무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농어업 발전의 책임자”

전북지역 농어민과 임업인 먹거리 소비자 단체 소속 회원 2,000명이 13일 전북도의회 광장 앞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입후보 예정자 지지를 선언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립 치매전문요양원 신설”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일곱 번째 정책브리핑을 통해 “전주 치매 걱정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전주시립 치매전문요양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13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매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며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더 나아가 우리사회 모두가 당면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 200억 원을 들여 전주시립 치매전문 요양원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전주의 경우 65세 이상 치매환



자가 1만264명(2021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치매전문요양원 신설을 위한 예산 200억 원을 들여 전주시립 치매전문요양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장기치료를 요하는 치매의 특성상 환자 가족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매약 복용 중인 환자 모두에게 월 3만 원의 치매치료관리비 지급과 인식표 발급 및 사전지문등록 등의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청년·신혼부부 1억원 무이자 대출 지원”

유창희 전주시장 예비후보

유창희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지원책으로 1억원의 무이자 대출지원과 아파트 임대료 지원을 공약했다.

유 예비후보는 13일 “최근의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위해 예비신혼부부에서부터 5년 이내 부부까지 최대 1억 원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기간은 5년부터 최대 10년까지이며 대출 규모는 소득에 따라 차이를 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11의 공공매입 임대주택에 신혼부부들이 입주할 경우 신혼부부에게 임대보증금 대출이자와 임대료



를 최대 5년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선택의 주택 구입 혜택을 주

기로 했다.

민간주택사업자에게 역점을 완화와 건축물 높이 규정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민간주택사업자의 참여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는 계획이다. 아울러 택지개발이 가능한 사유지를 확보해 11와 함께 소형 임대주택을 건립해 청소년과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